

【 주간이슈 】

우리나라 가계저축률 저하, 그 원인과 시사점*

연구위원 유경원

-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 사이에 은퇴 후 또는 노후소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개인)저축률은 오히려 하락추세
 - 우리나라 개인저축률의 급락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도 현격한 수준이며 개인저축률의 하락속도도 우려할 만한 수준임.
- 우리나라 가계저축률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보다도 외환위기 이후 개인소득의 낮은 증가세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거시적인 요인 이외에 개인저축률 저하 현상과 관련하여 보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교육비 부담의 증가, 이자상환 부담의 증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지출의 증대임.
- 저저축률 현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먼저 소비수준의 질 저하와 현세대의 노후대비 자산 부족이 제기될 수 있으며 아울러 자산의 대부분을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으로 보유함에 따라 가계가 경제적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가능성이 제기
- 저축을 광의로 해석할 경우 저저축률 현상의 핵심은 낮은 저축률이 아니라 저축의 구성변화라 할 수 있을 것임.
 - 가계의 저축률 제고를 위한 소비 구조조정 보다는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저축을 제약하는 지나치게 높은 인적자본 및 실물자산에 대한 저축을 적정화시키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함.
- 따라서 저저축률 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개인부문의 소득 증가가 제일 긴급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보다 구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교육문제의 해결이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임.

* 본고는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 연구원 개인의 견해를 밝히 둡니다.

1. 가계저축률, 그 날개 없는 추락

□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 사이에 은퇴 후 또는 노후 소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

○ HSBC설문조사*(2007)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은퇴 후 소비에 대한 불안이 미국, 덴마크 등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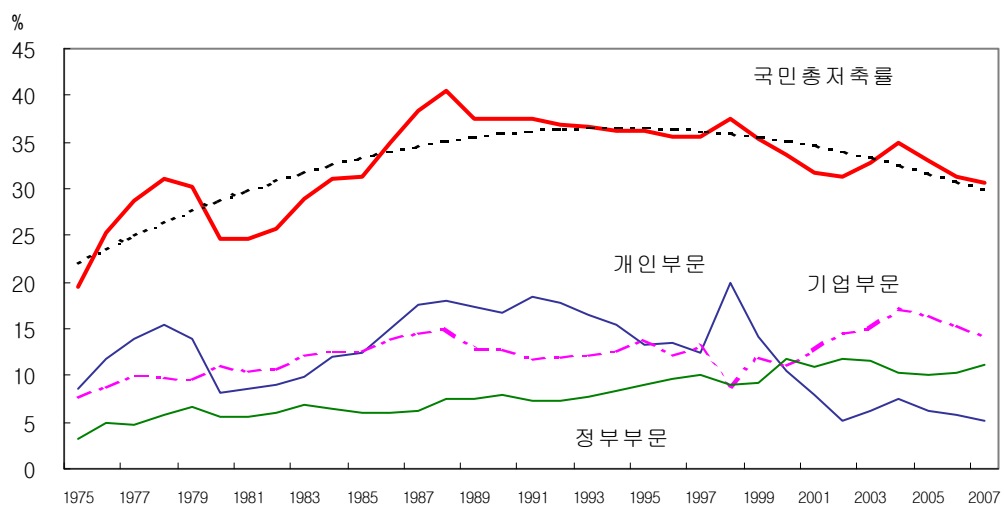
* HSBC 그룹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공동으로 전 세계 21개국의 40-70대 2만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

□ 그러나 이와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가계(개인)*저축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1988년을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이중 개인저축률의 하락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

* 국민소득계정상 ‘개인’에는 일반적인 가계 뿐 아니라 자영업 형태를 포함하는 민간 비법인 기업과 소비자단체, 노동조합, 종교단체 등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를 포함하며 본고에서는 가계와 구별없이 사용됨.

<그림 1> 우리나라의 저축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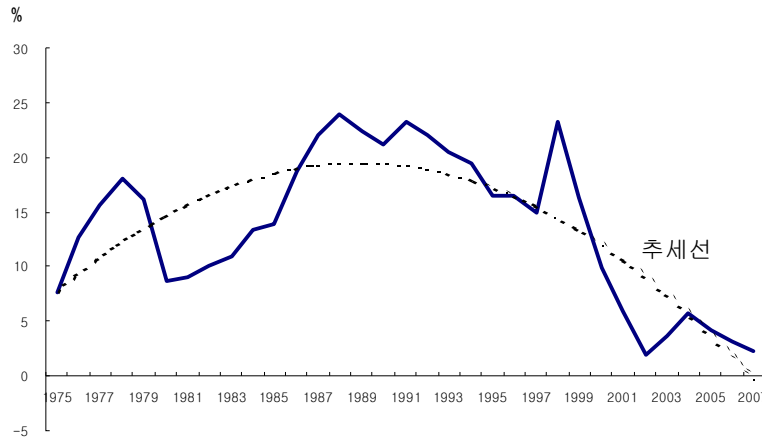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2008), ECOS

- 1980년대 후반 18% 내외였던 개인순저축률*은 2007년에는 2.3%까지 하락

* 개인순저축률은 국민소득 통계상 개인부문의 순처분 가능소득에 대한 순저축 비율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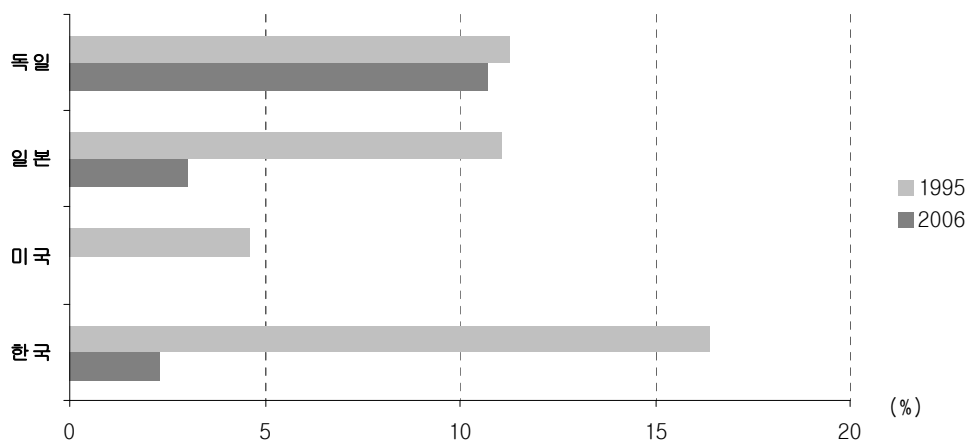
<그림 2> 개인순저축률의 추이



자료: 한국은행(2008), ECOS

- 한편, 이와 같은 우리나라 개인저축률의 급락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도 현격한 수준이며 개인저축률의 하락속도도 우려할 만한 수준임.
- 우리나라의 개인순저축률은 연평균 기준으로 1995년~2000년에 16.2%였으나 2001년~2007년에는 3.8%로 나타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하락 폭을 나타내고 있음.

<그림 3> 국가별 개인순저축률 추이



주: 독일, 일본, 미국은 2006년 말 자료이며, 한국은 2007년 말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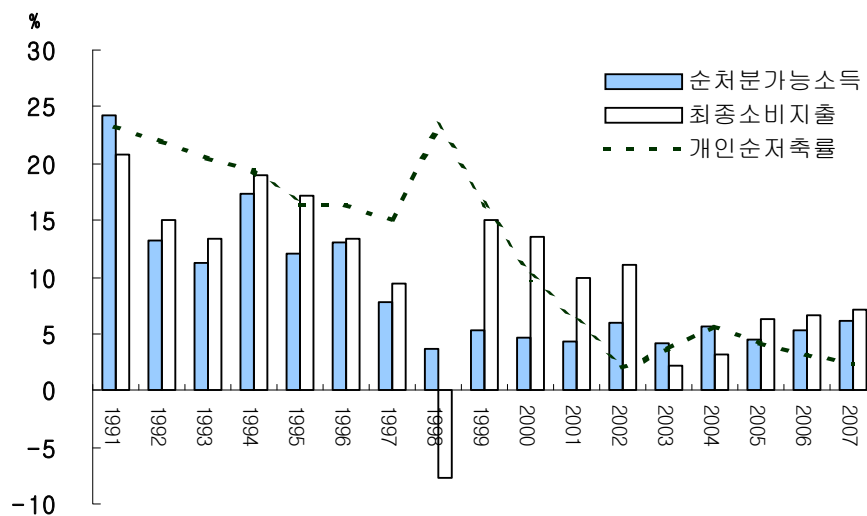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2007)

2. 저축률 하락의 원인

□ 저축의 일반적인 정의가 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차감한 나머지라고 한다면 저축률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은 외환위기 이후 개인소득의 낮은 증가세라고 할 수 있음.

- 개인 순처분가능소득은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연평균 5.5% 늘어나는데 그쳐 이전 1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 16.1%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개인부문의 저저축률 현상의 주요원인으로 제기
- 한편, 저축률 저하 현상을 소득계층별로 살펴볼 때, 고소득계층의 저축률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중·저소득계층의 저축률 하락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저축률 하락은 주로 이들 계층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4> 개인부문 순처분가능소득 및 최종소비지출 증가 추이



주: 순처분가능소득 및 최종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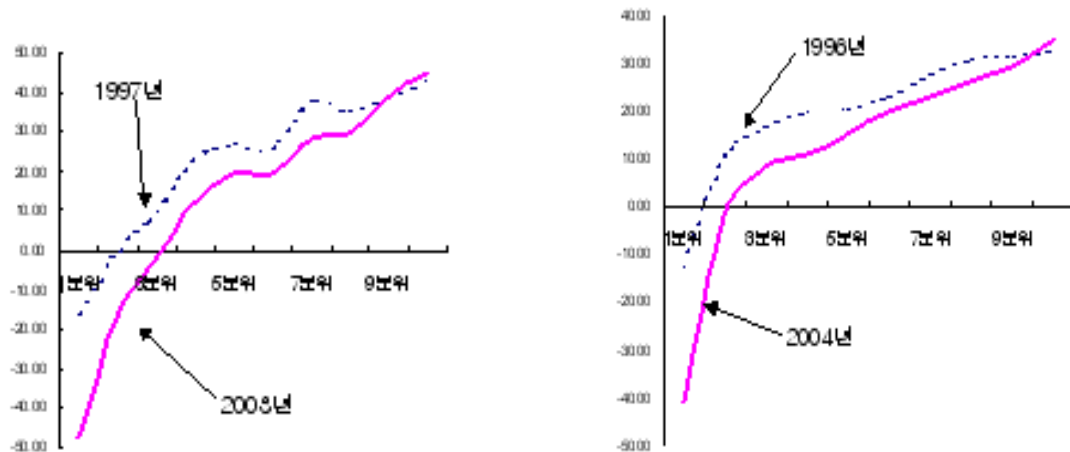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2008), ECOS

□ 그러나 이와 같은 거시적인 요인 이외에 개인저축률 저하 현상과 관련하여 보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가계의 자산구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체현상임.

- 이론적으로 볼 때 가계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산, 부동산 등 실물자산, 그리고 금융자산 중에서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자산을 가계의 상이한 특성에 따라 보유를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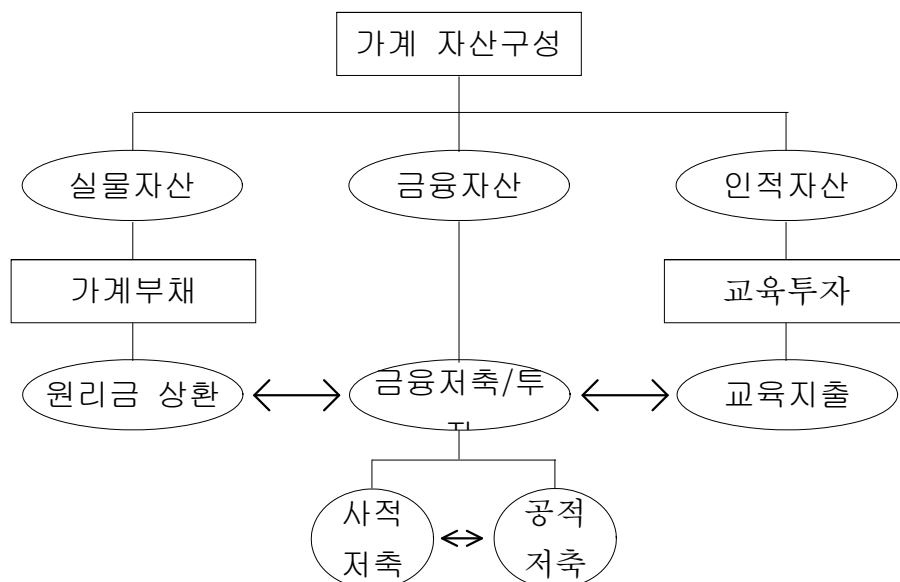
- 따라서 가계의 자산구성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가계의 저저축률 현상은 가계의 금융자산과 다른 형태의 자산간 대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

<그림 5> 외환위기 전후 소득계층별 저축률 격차



자료: 노동연구원, 「노동패널조사」 (좌측);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우측) 각 년도

<그림 6> 가계 자산구성과 저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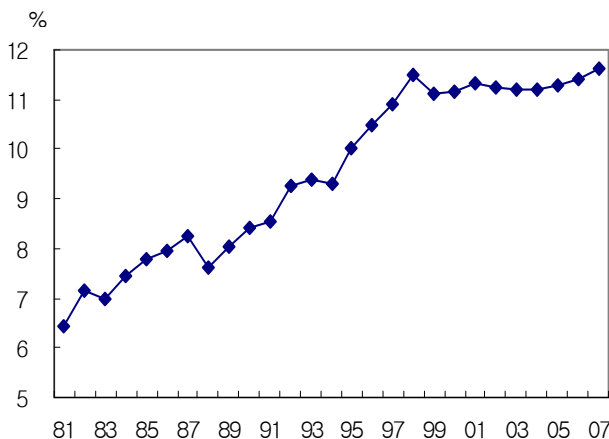
주: 실물자산에는 부동산 자산 등이, 인적자산에는 가계 구성원의 교육수준, 건강 등이 포함되며 공적저축에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관련 납부액이 포함됨

가. 교육비 부담 증가 (금융자산→인적자본)

□ 1980년대 이후 가계소비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초 6% 수준에서 최근에는 12% 수준까지 상승하여 우리나라 가계의 교육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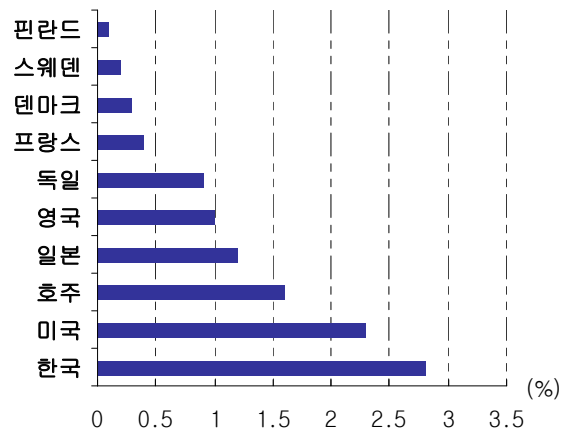
-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교육비 지출의 민간 부담(GDP대비)은 2003년 OECD 평균(0.7%)보다 네 배 이상 높은 2.9%로 OECD회원국 중 최대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같이 높은 민간 교육관련 지출은 고스란히 국민이 느끼는 실제 경제적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7> 가계소비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통계청(2008), KOSIS

<그림 8> 국가별 교육비 지출의 민간 부담 (GDP 대비)



자료: OECD Factbook(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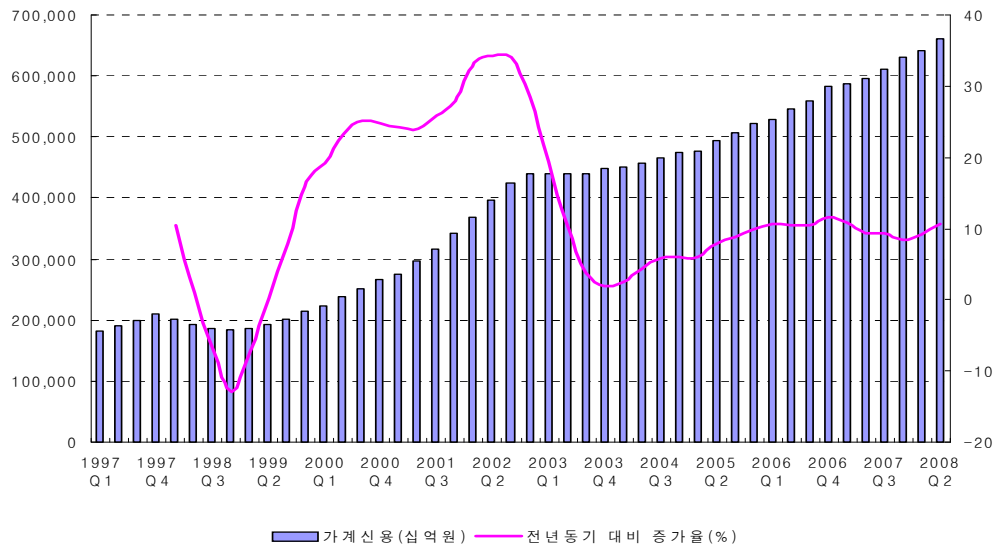
□ 결국 이와 같은 가계의 높은 교육비 부담은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소비로부터의 대체와 금융저축의 감소를 통해 조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나. 이자상환 부담의 증가 (금융자산→실물자산)

□ 가계의 금융부채규모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6월말 현재 781조원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 말의 3배가 넘는 규모까지 상승

- 2000-2007년 기간 중 가계신용은 두 배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2008년6월말 현재 가계신용잔액은 660조원(가계대출 623조, 판매신용37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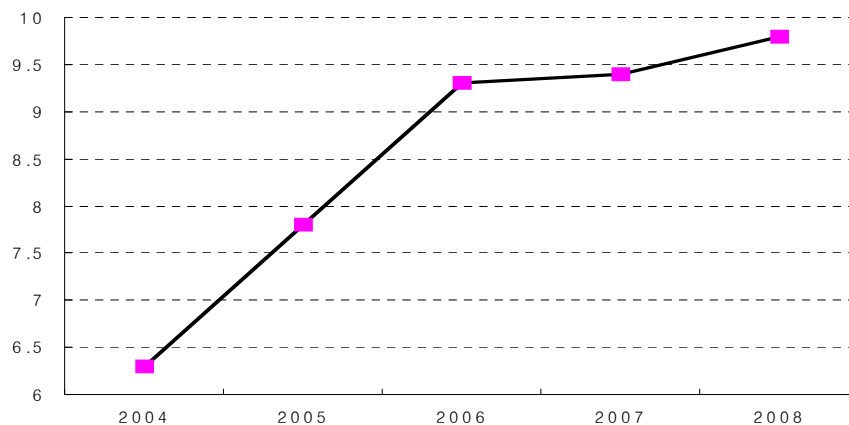
<그림 9> 가계신용잔액 추이



자료: 한국은행(2008), ECOS

- 2005년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난 금융부채는 상대적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한 중·고소득층의 자산취득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가계의 실물자산증가로 이어졌으나 이로 인한 이자 부담 역시 급증

<그림 10>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지급이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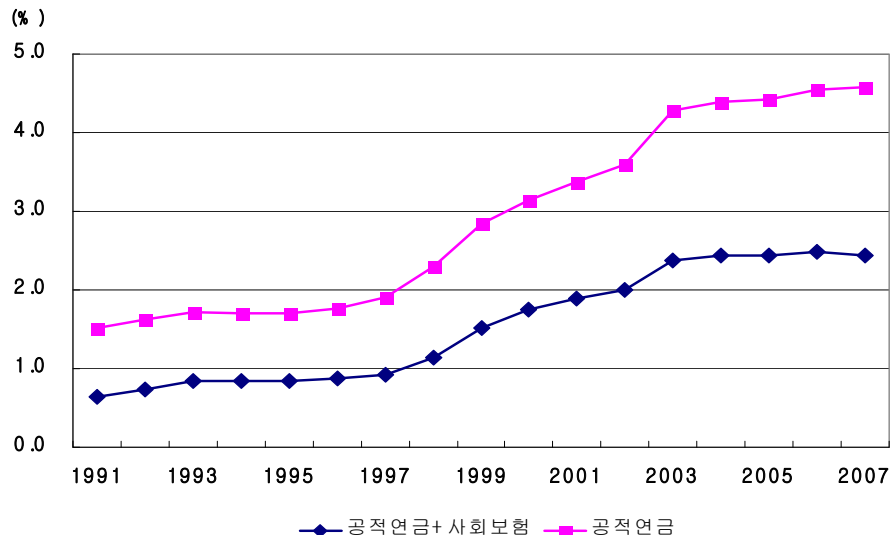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2008), 「금융안정보고서」, 2008.10

□ 결국 소비자금융의 발달과 低이자기조의 정착으로 인해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높아진 가계가 부동산 자산 구입을 위해 금융자산을 소진하고 금융부채를 활용함으로써 이로 인한 이자상환 부담이 가계 저축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

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지출 증대 (사적저축→공적저축)

□ 1990년부터 외환위기 전후 공적연금과 사회보험 지출의 소득대비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외환위기전 기간(1990-1997) 평균이 2.4%에서 외환위기 이후 두 배 이상 증가한 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1> 도시간구의 소득대비 공적연금과 사회보험 지출 추이



자료: 통계청(2008), KOSIS

□ 이와 같은 공적저축에 대한 부담과 함께 의료보험 등 비소비지출의 확대가 가계의 저축을 일정부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일반적으로 공적연금은 사적저축을 대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공적연금의 경우 저소득계층의 저축유인이 고소득계층에 비해 보다 약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최근의 연구결과 역시 국민연금제도가 외환위기 이후 가계저축률 하락에 영향을 미쳐왔으며 소득계층별 저축률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3. 가계저축률 하락의 문제점

□ 첫째, 교육비 증가로 인한 저축의 감소는 현재 소비생활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와 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현세대의 노후 대비 자산이 부족하게 되는 문제가 초래될 수 있음.

- 교육비 재원 마련을 위해 가계가 현세대를 위한 금융자산의 일정부분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현재의 소비 역시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소비의 질적 저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하나금융그룹(2007)설문조사에 따르면 30-40대 계층의 60%가 은퇴준비를 못하는 상태이며 이들 중 50%가 자녀 교육비 부담에 기인하는 것으로 응답

□ 둘째, 자산의 대부분을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으로 보유함에 따라 우리나라 가계는 금리변화, 실업 등 경제적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음.

- 가계가 적정수준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제적 충격시 금융자산의 일부를 처분하여 소비활동을 계속함으로써 경기변동의 진폭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금융자산의 규모가 작은 반면, 금융부채가 큰 경우에는 경기하강 국면에서 경기위축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제기됨.
- 주택시장의 불안이 금융시장으로 쉽게 전이될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시장의 자금경색과 주택시장 여건 변화가 가계의 재무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

4. 시사점

□ 저축을 소득과 소비지출의 차이로 정의한다면 가계는 소비지출 조정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으나 低저축률 현상의 핵심은 낮은 저축률이 아니라 저축의 구성변화라 할 수 있을 것임.

- 저축을 광의로 해석하여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그리고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까지 포함시킬 경우 우리나라 가계의 대부분은 실제로 자신을 위한 저축 및 소비지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 최근 기존 국민계정상의 ‘저축’이란 정의가 실물생산 위주의 경제에 적합한 개념으로 금융시장이 발달하고 연구개발(R&D) 및 교육을 중시하는 지식기반 경제하

에서는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제기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계의 저축률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현세대의 소비 구조 조정 보다는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저축을 제약하는 지나치게 높은 인적자본 및 실물자산에 대한 저축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함.

- 현재 우리나라 가계자산구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택자산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경제·사회의 변화로 인해 향후 현세대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
- 현세대는 지금의 ‘Live Poor, Die Rich’의 삶을 앞으로도 지속시킬지 여부를 자신의 현재 저축 및 소비수준을 보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때임.

□ 低저축률 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개인부문의 소득 증가가 제일 긴급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보다 구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교육문제의 해결이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임.

-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서민들의 주택구입에 대한 부담이 낮아질 때 저·중소득계층의 저축률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며 공교육 정상화와 세대간 교육비의 적정 부담이 이루어질 때 가계의 노후대비 금융자산 축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향후 소비자금융 정책은 소득계층별로 차별화하여 저소득계층의 경우 정책 방향을 소비자신용의 접근성과 지급수단의 편의성 제고보다는 자산형성 지원에 맞출 필요가 있으며 고소득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률을 적정화시켜 소비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저소득계층의 경우 불확실한 노후나 소득충격에 대비할 수 있을만한 적정한 수준의 금융자산 축적이 결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자산형성지원 정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 선진 각국에서도 이와 같은 저소득계층의 자산형성 필요성에 따라 저소득층이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여 가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자산형성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저소득계층의 자산형성 지원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 판단됨. KiRi